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4.6.28 시행)

01.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 ③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④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 ⑤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답] ① 선례가 없는 새로운 문제보다 일상화된 문제가 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특성요인

- (1) 문제의 중요성 : 영향을 받는 집단(이해관계집단)이 크고(넓고) 문제의 내용이 대중적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2) 쟁점화의 정도 :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 (3) 문제의 인지집단의 규모 : 문제를 인지(제기)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4) 문제의 구체성 : 논란이 있으나 문제가 추상적일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5) 사회적 중요성 :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파급효과)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6) 선례의 유무 : 관례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7) 해결책의 유무 : 해결책이 있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8) 복잡성 여부 : 복잡한 문제보다 단순한 문제가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02.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 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답] ① ①은 합리모형의 특성이다. 회사모형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단기적 대응과 단기

적 피드백(환류)을 중시한다.

03.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를 말한다.
-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답] ⑤ 크리밍효과나 호오손효과는 정책평가의 외적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평가계획)가 이루어진 정도로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
내적 타당도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외생변수)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원인변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이론화)를 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

04.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 ① 10억 원의 예산
- ② 200명의 교육생
- ③ 연 300시간의 교육
- ④ 50명의 취업
- ⑤ 3%의 국가경쟁력 제고

[답] ④ ④의 50명 취업이 성과에 해당한다. 성과 또는 결과란 정책산출이 정책대상자에게 가져온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말한다.

- ☑ ① 투입
 ②③ 산출
 ⑤ 영향

05.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 ㄱ.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ㄴ.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ㄷ.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ㄹ.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ㄹ.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ㄹ
 ④ ㄱ, ㄹ, ㄹ
 ⑤ ㄱ, ㄴ, ㄹ

[답] ③ ㄷ, ㄹ, ㄹ만 옳다.

- ☑ ㄱ. 진보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 정부관이다.
 ㄴ. 공공선택론은 전통적인 대규모 관료제보다는 시민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분권화되고 시장화된 탈관료제조직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선호한다.

■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인간관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는 인간 ·경제인관 부정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치관	·자유를 열렬히 옹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로의 자유)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배분적 정의 (부의 공정한 분배)	·자유를 강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정시) ·교환적(평균적) 정의 (거래의 공정성)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에 의해 치유 가능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율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체적 공포

06. 롤스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원초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답] ⑤ 정의의 제2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 정의의 원리(J.Rawls)

제1의 원리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의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불평등의 시정능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

07.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면허방식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③ 보조금 방식
 ④ 책임경영 방식
 ⑤ 자조활동 방식

[답] ④ 책임경영방식은 정부가 시장화된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 공급하는 책임운영기관방식을 말한다. 내부시장화된 기관일 뿐 민영화된 기관이 아니며, 신분도 공무원이고 기관의 성격도 정부조직이다.

■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방식	개념	장단점(특징)
민간위탁(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	경쟁 입찰을 통한 생산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 미약시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
프랜차이즈	독점허가(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보조금방식	외부경쟁을 유발하는 생산업체 (민간조직)에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	재분배성적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
자원봉사자 방식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레크리에이션 등)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 공급총량 증대 가능

자조활동 (자기생산)	스스로 이웃끼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이웃감시, 주민 순찰 등)	
----------------	---	--

08.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 ① 67%
- ② 50%
- ③ 40%
- ④ 25%
- ⑤ 20%

[답] ② 내부수익률이란 투입된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80 = 120/(1+i)$ 이므로 $i = 40/80 = 0.5$ 가 된다.

☞ 2014 선행정학 p.

09.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 ② 금융위원회
- ③ 국민권익위원회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 ⑤ 방송통신위원회

[답] ⑤ ⑤는 대통령소속 위원회이다. (수업때 대통령-개·방·구라고 암기법까지 일러준 문제)

■ 정부위원회의 소속별 종류 (2013.3 정부조직개편 이후)

구분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국민대통합위 청년위	방송통신위 규제개혁위 개인정보보호위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원자력안전위

10.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국가재정법 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④ 행정협의회
- ⑤ 갈등조정협의회

[답] ① 중앙과 지방 간 협의·조정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

지방정부 동일시·도내 기초단체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 결정	구속력 있음 ·필요예상 우선 ·판성
상 광역과 기초단 체간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 단체 간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조정결정	·직무상 이행명 령 ·행정대집행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구속력 없음

12.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

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 ⑤ 계획예산제도

[답] ① 설문은 2005년 우리 정부가 도입한 자율편성예산제도를 말한다.

13.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 ⑤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답] ②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부3.0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중시한다.

■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2.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3. 민관협치 강화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윈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답] ⑤ ⑤만 옳다. 나머지는 모두 반대이다.

■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필요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근린행정
----	---

성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전문행정
폐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단	· 종합행정 및 현지행정 저해 ·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15.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주민세
- ② 담배소비세
- ③ 상속세
- ④ 취득세
- ⑤ 자동차세

[답] ③ 상속세는 국세이다.

■ 지방세목 체계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6.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㉒, ㉓
 ⑤ ㉓, ㉔

[답] ④ 나, 드만 옳다.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답] ② ㉓만 옳다.

■ 공공기관의 유형 (실정법상 구분)

공 기 업	시장형	가스, 전력, 공항, 항만 등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18.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답] ③ 인사권자에게 채량권을 주어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장악력을 높여준다.

■ 개방형인사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 · 공직의 침체 방지 - 문화개방으로 신진대사 촉진 · 성과관리의 촉진 · 관료의 소극적 행태(복지부동) 시정 · 정치적 리더십과 조직장악력 강화 ·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 생산적 경쟁으로 재직자의 자기 개발 노력 촉진	·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와 사기 저하 · 관료의 비능률화 - 충성심 저하 · 직업공무원제에 불리 - 신분 보장 저해 · 공직사회의 응집성·일체감·안정성 저해 · 임용구조의 복잡성·비용 증가 ·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 - 정치적 오용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19.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of error)
 ⑤ 시간적 오차(recency of error)

[답] ① 설문은 상동적 오류에 해당한다.

■ 근무성적평정상 착오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 관념·편견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20.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답] 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매년 국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 것은 맞지만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아니다.

■ 국가재정법 관련조문 발췌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6. 성과계획서
7. 성인지 예산서
8. 조세지출예산서
9.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규모 및 이유 등
10.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상호간 여유재원 전출입 명세서
11. 국유재산특별지출예산서
12.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